

제287호 (2010. 12. 6)

■ 경제 동향

- 10월 주택사용검사 실적 전월 대비 72.3% 증가

■ 정책·경영

- “녹색건설시장 활성화, 정부 주도가 바람직”
- ‘해외 녹색건설시장 선점’ 위해서는 정부 역할이 중요

■ 정보 마당

- 미국 ABET 인증기준 ‘outcome specific’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

■ 연구원 소식

■ 건설 논단 : 미국 AGC 연차총회에서 보는 이슈

10월 주택사용검사 실적 전월 대비 72.3% 증가

- 수도권 · 공공 · 아파트 · 소형 증가에 기인 -

■ 주택사용검사 실적 통계 매월 공표

- 주택사용검사는 주택법 제29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 그 주택에 대하여 입주 전에 시장 · 군수 · 구청장에 의해 사용승인을 받는 행정절차임.
- 주택사용검사 실적 통계는 통계청으로부터 국가통계로 승인(2010.8.16) 되었으며, 지난 8월 26일부터 월간 단위로 공표함.
 - 자료의 시계열은 2010년 1월부터 현재까지 10개월의 자료가 축적됨.
- 주택건설 인 · 허가 실적이 향후 주택 공급량을 가늠하는 선행지표라면, 주택사용검사 실적은 현재의 주택공급동향의 동행지표가 될 것임.
 - 기존에는 민간정보업체의 아파트에 한정된 자료에 기인하여 주택공급동향을 파악하였으나, 주택사용검사 실적 통계로 인하여 모든 주택의 공급동향을 파악할 수 있게 됨.

■ 10월 주택사용검사 실적 전월 대비 72.3% 증가

- 2010년 10월 전국 주택사용검사 실적은 3만 2,676호로 9월에 큰 폭으로 감소한 이후 다시 전월 대비 72.3% 증가함.
-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106.5%의 큰 폭의 증가를 보였으며, 5개 광역시는 89.1%, 기타 지방은 23.5% 증가함.
 - 인천은 4,420호(전월 대비 479.3%)로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주택사용검사 실적을 보임.
- 부문별로는 공공에서 전월 대비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유형별로는 연립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임.
 - 공공부문 전월 대비 230.6%, 민간부문 38.2% 증가함.
 - 연립(258.0%)과 아파트(112.4%)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 다가구는 0.3% 감소함.

- 규모별로는 소형에서 전월 대비 317.9%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대형은 77.9% 증가, 반면 중형은 11.9% 감소함.

■ 2010년 주택사용검사 실적 30만호 내외 전망

- 2010년 10월까지의 전국 주택사용검사 누적 실적은 25만 9,928호이며, 수도권·민간·아파트·대형에 집중되어 있음.
 -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50% 이상의 물량이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서울(2만 9,696호)과 경기(9만 9,410호)에 집중되어 있음.
 - 부문별로는 대부분 민간부문에서 74.8%의 실적을 보였으며, 공공부문은 25.2%에 불과함.
 - 유형별로는 아파트(73.5%) > 다세대(11.2%) > 단독(9.8%) > 다가구(4.6%) > 연립(1.0%) 순으로 나타남.
 - 규모별로는 대형이 40.0%로 가장 많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은 중형(32.6%), 소형(27.4%)의 순서임.
- 2010년 연간 주택사용검사 실적은 그 동안의 월평균 실적 등을 감안하였을 때 30만호 내외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월평균 주택사용검사 실적 : 2만 5,993호

<주택사용검사 실적(2010년 10월)>

구분	10월			누적(2010.1~2010.10)	
	호수	비중(%)	증감률(%)	호수	비중(%)
전국	32,676	100.0	72.3	259,928	100.0
수도권	18,433	56.4	106.5	142,665	54.9
5개 광역시	5,318	16.3	89.1	39,733	15.3
기타지방	8,925	27.3	23.5	77,530	29.8
공공	11,117	34.0	230.6	65,430	25.2
민간	21,559	66.0	38.2	194,498	74.8
단독	3,148	9.6	7.0	25,425	9.8
다가구	1,356	4.1	-0.3	11,875	4.6
다세대	3,464	10.6	10.5	29,081	11.2
연립	537	1.6	258.0	2,614	1.0
아파트	24,171	74.0	112.4	190,933	73.5
소(60㎡ 이하)	10,113	30.9	317.9	71,250	27.4
중(60~85㎡)	6,750	20.7	-11.9	84,746	32.6
대(85㎡ 초과)	15,813	48.4	77.9	103,932	40.0

자료 : 국토해양부

엄근웅(연구원 · kyeom@cerik.re.kr)

“녹색건설시장 활성화, 정부 주도가 바람직”

- 국가계약법 등 법·제도 정비 시급, 각종 우대·혜택 조치도 효율적 -

■ 국가계약법을 통한 공공 녹색시장 확대 방안

-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공공 녹색시장 확대 방안’을 발표함.
 - 녹색제품의 공공시장 진입장벽 완화, 녹색제품의 공공 수요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공공건물 등의 녹색설계 및 시공 확대를 위한 16개의 실천과제 제시
- 공공 녹색시장 형성 → 민간의 기술변화 유인 강화 → 가격/품질 경쟁력 강화 → 녹색 성장을 통한 선순환 구조를 구상하고 있음.

<국가계약법의 주요 녹색 정책 개정 사항(안)>

분야	과제	내용
공공건물 등의 녹색설계 · 시공 확대	공공건물에 대한 녹색설계 강화	- BIM을 활용한 에너지 시뮬레이션 시범 실시 및 친환경 자재 설계 반영 유도
	녹색 건설기업에 대한 정부공사 입 · 낙찰 우대	- PQ · 적격심사시 녹색건설기업 우대 - 설계심사시 녹색건설기술 우대 평가 기준 마련
	기존 공공건물의 친환경 · 에너지 절약형 리모델링 지원	-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서비스 지원기능 강화 -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서비스 제공 - 리모델링 공공건물 이력관리 등
	친환경 · 에너지 절감 자재의 공공건물 사용 확대	- ‘에너지절약 설계 및 친환경자재 구매가이드라인’ 마련 - 녹색건설자재 분리 발주 기준 마련

자료 : 공공녹색시장 확대방안 보도자료, 녹색성장위원회, 기획재정부, 조달청, 2010.7.13, pp.10~12.

■ 녹색건설사업과 연계한 우대평가기준 필요

- 녹색건설사업과 연계되어 이러한 우대평가 기준이 활용될 것인지 아니면 사업과 상관 없이 우대할 것인지 본 개정사항(안)은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음.
 - 모든 시설에 녹색기술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의 기술실적을 우대하는 것은 타당할 수 있음.
- 하지만, 실제 녹색건설시장이 열리기 위해서는 명확히 규정된 녹색설계기준에 따른 녹색건설사업이 발주되고 이에 따른 각종 실적 우대 및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의 설정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녹색건설사업 인증을 통한 발주자 인센티브 부여도 바람직*

- 국가계약법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녹색건설사업은 지식경제부의 녹색인증제도**를 통해 국가적으로 공식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발주자가 녹색건설사업의 주요 사업계획을 사전에 공식적으로 인증받도록 하여 예산이나 발주 및 입찰 과정에 녹색건설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자는 것임.
- 공공시설 중 기존의 인증제도에 의한 사업도 포함하여 만약 녹색건설사업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본계획에 관련계획을 수록하여 녹색사업인증 획득하도록 해야 함.
 - 인증의 통과 여부에 따라 정부는 녹색건설사업을 공식화하여 관리하고 해당사업에 발주자와 공급자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근거를 가질 수 있음.

<국가계약법 녹색건설 관련 인센티브 부여의 기본틀(안)>

구분	대상	기준	방법	비고
녹색 건설 사업	녹색건설사업 발주	- 녹색인증제도에서 녹색사업으로 인증받은 건설사업	- 발주방식 결정의 융통성 부여 - 기술력 중심의 낙찰자 결정	녹색인증 신청 의무화 유예기간 설정
	녹색건설 실적	- 녹색인증제도에서 녹색사업으로 인증받은 건설사업 실적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실적 - 친환경건축물 인증 실적 - 해외 녹색건설 인증 실적	- 동일공사 실적평가시 우대	유예기간 설정
	녹색건설기업	- 녹색인증제도에서 녹색전문기업으로 인증받은 건설기업 - 녹색인증제도에서 녹색기술로 인증받은 건설기술을 보유한 건설기업 - 녹색경영체제 인증을 받은 건설기업	- 신인도 가점 - 정부계약에 관한 각종 보증금 납부 감면 - 의무선금지급률 상향	유예기간 설정

- 녹색건설사업에 대한 혜택으로는 녹색사업 발주의 융통성 부여, 실적에 대한 우대사항, 그리고 기업에 대한 신인도 가점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녹색건설사업에서 발주 융통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가격경쟁을 지양하는 방식을 발주자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함.
 - 실적의 혜택 역시 녹색인증제도에 의한 사업, 친환경건축물 인증 실적, 해외 녹색건설사업과 향후 확장될 녹색 인프라 사업 등에 적용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최석인(연구위원 · sichoi@cerik.re.kr)

* 최석인·이복남·이영환, 녹색성장 정책/제도의 추진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0. 10, pp.59~66.

** 지식경제부 녹색인증제도는 녹색기술, 사업,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임. 9대분야 95개사업으로 되어 있는 녹색사업에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대다수의 녹색건설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하지만, 이 제도는 민간기업인증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공공발주자의 건설사업인증을 위한 개선이 필요

‘해외 녹색건설시장 선점’ 위해서는 정부 역할이 중요

- 정부 차원의 녹색인증제 개발 및 사업 통해 해외시장 주도 가능성 충분 -

■ 미국의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녹색화 사례

- 미국은 녹색건물·녹색도시에서 도로와 철도, 항만과 공항 등 사회간접시설로 녹색화를 확대해가고 있음.
 -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녹색화 확대는 지구온난화 속도 저감을 위한 것도 있지만 국민들의 높아진 환경 보전 인식도 크게 작용하고 있음.
 - 미국의 녹색화 추진 배경에는 다른 국가나 지역보다 앞서서 녹색건설에 대한 기준과 표준을 만들어냄으로써 새로운 먹거리 창출은 물론 국민들에게 지속 가능한 개발이 가능함을 실체적으로 보여주는 데 있음.

■ 미국의 녹색화 기본 개념과 접근 방식

- 미국의 사회간접시설 녹색화 기본 개념은 자연을 그대로 두기보다 국민 편익을 위해 불가피하게 개발해야 함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
- 개발은 하되 자연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향과 에너지 사용량을 최대한 억제시키는 방향임.
 - 자연을 자연의 치유에 맡기기보다는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환경 보전 기술을 최대한 동원하여 국민과 자연이 상생 할 수 있는 환경 구축에 목표를 둠.
- 녹색화 정책 성공을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앞서야 함을 인지하고 있음.
 - 초기 비용 부담에 대한 부담감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무임승차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전략으로 보임. 철저하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전달하는 ‘top-down’ 방식임.

■ 한국의 녹색건설시장 주도 가능성 전망

- 녹색성장 혹은 녹색건설에 대한 개념, 정의, 범위가 전 세계 공통적으로 인정받는 표준이나 규격이 현재까지 없음. 누구든 선점하면 최초의 선점자가 모델이 되는 상황임.

- 비록 미국의 민간 녹색건물위원회(GBC)가 주도하여 만들어낸 녹색건물 표준규격이 있지만 영국이나 일본 등은 자국의 규격을 따로 규정하고 있음.
- 미국 서부 워싱턴주가 녹색도로인증제, 녹색공항인증제, 녹색항만인증제 등을 선도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이유도 시장 선점에 있다는 판단임.
- 한국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부문별 녹색인증제를 국가 혹은 범산업 차원에서 개발하고 또 시범사업을 통해 이를 실물로 검증할 경우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중동지역은 물론 북아프리카, 중앙아시아와 남미 등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신흥국 시장에서 한국형 녹색인증제도가 실물을 통한 검증 능력을 갖출 경우 상당한 매력을 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국내 시장에서도 이미 사용 중인 도로나 항만, 공항 등 사회간접시설의 성능 개선시 녹색인증제를 도입할 경우 상당한 규모의 신규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보임.

■ 정부 차원의 녹색인증제 개발 및 사업 통해 해외 진출 가능

- 정부가 국내외적으로 이미 공언한 2020년까지 2005년 기준 탄소배출량 4% 감축계획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산업비중이 높은 건설산업에서 생산한 사회간접시설에 녹색건설 기준과 표준 규격 등이 시급하게 만들어져야 함.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담긴 공기질의 한계를 넘어 땅과 물까지 녹색건설시장에 포함시켜 한국의 녹색인증제를 개발할 경우 시장 가능성이 충분함.
 - 다만 이 부문을 민간이 주도하기에는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데 애로 사항이 예상됨.
- 사회간접시설에 녹색건설을 접목시켜 한국의 새로운 성장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와 공공발주기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함.
 - 시장이 전 세계에서 본 궤도에 오르기 전까지는 정부의 법과 제도가 선도해 나가야 하기 때문임.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녹색건설 기술 개발 투자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정부의 몫임.

이복남(연구위원 · bnlee@cerik.re.kr)

미국 ABET 인증기준 ‘outcome specific’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

- 산업계 요구를 대학 커리큘럼에 반영, 실무능력 배양 강화 -

■ 미국 공대, ABET 인증 기준에 의거한 교육 과정 진행

- 미국 공학의 교육은 기본적으로 ABET(미국공학기술인증원 : 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and Technology)이 제시하는 인증 기준에 의거하여 기본적인 커리큘럼이 작성되고 교육이 이루어짐.
 - ABET은 ASEE(미국공학교육학회: American Society for Engineering Education), ASCE(미국토목학회: American Society of Civil Engineering) 등 학·협회의 이사들이 파견되어 구성된 기관임.
 - 미국 공과대학의 커리큘럼은 기본적으로 ABET의 공학 교육 프로그램 인증 기준이 바뀌면 이를 기준으로 바뀌고 있으며, 이 외에 일부 과목이 추가되거나 삭제되는 미미한 변화는 교수간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짐.

■ ABET 인증 기준의 지속적 개선을 통해 산업계의 요구 반영

-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산업계의 요구와 학계 교육내용 간 격차를 어떻게 줄여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음.
- 이와 관련, 지난 10년 동안 ABET의 교육프로그램 인증기준을 바꾼 큰 변화가 있었음. 이는 졸업생이 현장에 투입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산업계(고용주들) 건의로 이뤄짐.
- 이에 따라 대학 교육에서 엔지니어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커리큘럼의 도입이 매우 신속해짐. 즉, 과거 1학년 과정에서는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과목이 전혀 없었던 반면 현재는 1학년 때부터 Engineering Science에 대한 과목을 배우도록 하고 있음.
 - 일례로 최근 일부 대학에서는 1학년 때부터 ‘엔지니어링 디자인’이라는 과목을 도입하고 있음. 이는 ‘engineering communication’에 관한 코스로 report 방법, speech 방법 등 엔지니어링에 있어서 매우 실무적인 내용을 가르치는 것임.
 - 또한, 1학년 때 대규모 엔지니어링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를 하기도 함.

■ ABET에 산업계의 요구 반영을 위한 경로 마련

- 미국의 경우 ABET에서 정하는 인증 기준에 산업계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것은 산업계의 자문회의를 두고 있기 때문임. 즉, 업계의 각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문회의를 구성하여 이사회에 의견을 제출, 인증 기준 등의 재정에 영향을 미침.
- ASCE, 엔지니어링협회 등의 소속원들이 ABET에 속해 있고, 협회에 소속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산업계에 종사하고 있어 그들의 의견이 ABET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
-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산업계의 의견이 대학 커리큘럼에 반영된다는 점임.

■ ‘outcome specific’이 ABET의 새로운 인증 기준으로 추가될 예정

- 조만간 ABET 인증 기준에 ‘outcome specific’이 새로운 기준으로 추가될 예정임. 이는 ‘결과를 중시해야 한다’는 산업계의 의견이 ASCE를 통해 ABET에 제시된 결과임.
- 이는 학생들이 어떤 지식을 알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이를 알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는가의 문제임. 즉, 알고 있는 지식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임.
- 과거에는 좋은 엔지니어가 되는 방법이 중요했다면 지금은 좋은 엔지니어의 조건들에 대한 세부 사항들을 요구함.
- 결과적으로 예전엔 과정을 중시했다면, 지금은 결과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 이에 따라 testing, problem solving, case study 등이 중요해짐.
- 최근 미국에서 ‘outcome specific’이 강조되는 이유는 유사한 과정을 거친 졸업생들이 산업계에 나가서 knowledge, skill, attitude 측면에서 공통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것임.
- 예를 들어 각기 다른 학교에서 동일한 과목을 배운 학생들이 공통적인 능력을 가지게 하는 것(또는 가졌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가 됨. 단순히 어떤 과목을 배웠다는 것이 아니라 ‘○○, △△ 과목을 수강 이수했으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공통적인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

김민형(연구위원 • mhkim1@cerik.re.kr)

최은정(연구원 • kciel21@cerik.re.kr)

■ 주요 정부 부처 및 기타 공공, 유관기관 회의·세미나 참여 활동

일자	기관명	주요 내용
11.30	부산발전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시 정비사업 사업성 분석 및 재평가를 위한 정책 간담회’에 건설경제연구실 두성규 실장이 자문위원으로 참여 - 기존 도시정비사업 부진 및 문제점의 근본적 원인 진단과 재개발 사업의 문제점, 그리고 향후 방향진단과 사업성분석 및 평가방식에 대한 검토 및 정책 반영 방안 강구
12.1	한국길포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지향적 지방관리도로의 발전방향 정책토론회’에 건설관리연구실 이복남 연구위원이 지명토론자로 참여 - 지방관리도로의 효율적인 관리방향에 대한 토론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 정책간담회’에 건설산업연구실 심규범 연구위원 참여 - 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 개선 방안 논의
12.2	국토해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건설공급과 주최 ‘주택사업 제도 개선방안 검토 회의’에 건설경제연구실 김현아 연구위원 참여 - 대규모 주택단지에서의 분할 분양·사용검사 허용,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혼합단지 관리방법 개선 등
12.3	한반도발전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관련 세미나에 기획조정실 윤영선 실장이 지명 토론자로 참여 - 북한지역발전방안 관련 토론
	한국경제T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경제TV와 해외건설협회가 공동 주최한 ‘2010 글로벌 건설포럼’에 건설관리연구실 이복남 연구위원이 세션 좌장으로 참여 - 글로벌 이머징 마켓 진출 전략에 대한 세션 진행

■ 제16차 ASIACONSTRUCT 컨퍼런스 참여

- 11.26~29일 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16차 ASIACONSTRUCT 컨퍼런스에 한국측 대표로 참여하여 주제(한국의 부동산시장의 동향 및 정책) 발표
 - 건설경제연구실 김현아 연구위원은 주제 발표를 통해 한국의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 및 정책 현황을 참가 7개국에 소개

■ 유럽 녹색건설사업의 벤치마킹 관련 원내 세미나 개최

- 12.1(목) 원내 연구진 대상으로 유럽 녹색건설사업의 벤치마킹 관련 원내세미나 개최
 - 건설관리연구실 이영환 실장이 ‘유럽녹색건설사업 및 기후행동보고의 사례 및 주요 시사점’에 대하여 주제 발표를 하고 토론 진행

미국 AGC 연차총회에서 보는 이슈

미국 일반건설업계를 대변하는 협회 'AGC'가 12월 15일부터 3일간 샌프란시스코에서 'Construction Super Conference' 주제 하에 2010년 제25차 연차총회를 개최한다. 2007년에는 대통령이 참석했을 정도로 미국 내에서도 위상과 관심이 높은 행사다.

특별 세션은 모두 3개인데 첫 번째 화두로는 세계가 관심을 갖고 있는 WTC 복원 사업이 등장했다. 또 다른 주제에는 최근 치러진 중간선거 결과 예상되는 상·하원 재구성이 미국 내 건설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망이 포함되어 있다. 세 번째 주제는 윤리적 이슈다.

일반 주제는 모두 31개. 일반 주제의 키워드는 계약분쟁, 경제 불황으로 인한 문제점, 계약 및 입찰과정의 투명성, 설계 완성도 저하에 대한 책임한계와 손실 등이다. 계약분쟁과 클레임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미국 건설시장의 고질병을 볼 수 있는 것 같다.

예년과 달리, 경제 불황으로 인한 문제점도 다루고 있는데, 자금난으로 중단된 사업에 대해 새로운 투자자를 찾아내는 전략과 방법론을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경제가 침체될수록 건설 시장은 줄어들고 경쟁은 심해짐에 따라 저가입찰, 계약 후 분쟁이 증가하는 현상, 공급자 주도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면서 공공건설조차 불평등 계약조건이 추가되는 사례 등이 발표된다. 특히 저가 하도급자의 부도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하도급자 선정 과정에서 어떤 조치를 강화해야 하는지도 주요하게 다뤄진다. 발주자가 의도적으로 가격을 낮추려 하거나 혹은 부도덕한 입찰자가 입찰 및 협상과정에 어떤 속임수를 동원하는지를 가려내는 방법도 다뤄진다.

민간투자시장에 관한 주제도 눈에 띈다. 최근 미국에서도 증가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PPP) 방식에서 이해당사자 그룹과 건설계약자 사이의 위상에 대한 주제도 있다. 설계 혹은 시공생산물에 대한 안전 및 품질보중에 대한 책임이 뚜렷한 반면 생산목적물로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건설관리책임자(CMr)의 윤리적 책임에 대한 주제도 보인다. 기술과 시장 측면에서는 최근에 부상되고 있는 오일가스시장에 관한 주제도 다뤄진다.

미국 전체 건설 매출액 비중의 50%를 넘는, 4,000여 종합건설업체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매출액 상위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어 미국 건설업계의 현안을 파악하는 데 충분하다. 우리나라 세미나에서 주로 다뤄지는 정부 정책과 제도, 업역 재편이나 해외건설시장, 선진화 등이 관심 영역에서 벗어나 있는 게 눈에 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나 의회 등에 촉구하는 내용도 들어 있지 않다. 로비가 합법화되어 있는 미국사회에서는 공개 토론보다는 협회·단체를 통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건설경제, 2010년 11월 16일>

이복남(연구위원 · bnlee@cerik.re.kr)